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6월 20일(통권63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문재인 정부 1년 정책평가와 대안: 사회복지정책

김 원 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대를 통한 양극화의 해소와 이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성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지 최저임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해고통지로 이어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들의 생산성과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과의 갭이 더 커져서 이들을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들은 저소득 근로자,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계층들이 된다.

이러한 소득증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정책 핵심 지표의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 4월의 전체 실업률은 4.1%였으나 체감실업률은 11.5%이었다. 청년실업률은 10.7%이나 체감실업률은 23.4%

로 청년 5명 중 한명은 사실상 쉬거나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우리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또한 처음으로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를 넘었다. 일본 역시 실업률이 2.9%로 최저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등 세계경기와 동조화되어 왔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한다.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도 줄고 있다. 1분기에 1분위 가처분소득은 12.8%, 2분위는 7.1%, 그리고 3분위는 3.0%로 모두 줄었다. 전체 가구의 반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은 다수의 가계, 특히 빈곤층에게 소득을 증대시킨 것도 아니고 이들의 복지수준이 개선되게 하지도 않았다.

여하튼,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더 절실하게 되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빈곤층의 보호라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의 효과는 소득분배를 평가지표로 사용한다. 복지정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념상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지 못하면 이는 사실상 재정의 낭비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적어도 중산층,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는 당선을 의식한 복지공약의 결과이기도 하다. 1년의 정책운영 결과로 볼 때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 정책목표로 하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

우선,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빈곤층에게 더 혜택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소득층의 의료비도 줄여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3인실의 입원비를 보험급여로 하면 병원이용이 높은 고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 이 재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복지적이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모든 빈곤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수혜자이다. 특히, 장수의 가능성은 고소득층이 더 높아서 실제로 치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치매노인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비용을 더 보장해 준다면 부양가족들은 더욱 경제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소득수준의 치매노인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재정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양극화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아동수당의 경우도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더 큰 수혜자라고 보아야 한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것이나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의 출산 결정은 안정적 직업, 주택, 육아환경, 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단지 아동수당만을 더 준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를 정말 낳고 싶은 저소득 부부에게 지원되지 않는 이상 효과는 낮다고 본다.

넷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 적어도 하위 20%에서 70%까지의 중산층 노인에 대하여 혜택이 늘어나는 것

이다. 노인들의 불만을 사겠지만 더 이상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효과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역시 누구보다 국가의 도움이 더 절실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무관하게 차상위 계층만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역시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진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표(買票)를 하는 행위로 본질적 복지정책이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수혜자가 거의 모두 빈곤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면서 건전한 재정시스템의 구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최근 사용자들에 대한 강압적 노동정책들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가득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다. 이들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채택되지 않으면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상 선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고 불평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심적인 소수의 국민들만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러한 양심적 유권자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는 살신성인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실질적인 복지가 개선되도록 해서 올바른 지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정부는 실

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는 복지정책인지 아닌지, 단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